

“영리하고 지혜로웠다. 냉철하고도 혁명적이었다. 20대 총선에서 보여준 ‘호남민심’의 모습이다. 무사안일과 기득권에만 안주하는 더불어민주당, 야권의 심장임에도 그들에게서조차 변방으로 내몰린 호남정치, 멀어져 가는 정권 교체에 대한 비원. 그사이 수없이 절망하고 한탄하고 고민하던 호남민심이 결국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호남정지도 정권교체도 영원히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지지양당 교체를 혁명적 결과로 표출된 것이다. 실제로 호남민심은 수없이 고민 해왔다. 모든 것을 다 바쳐 밀어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전연패하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정당, 기득권과 패권주의에 사로잡혀 그들만의 ‘이익집단’으로 전락해 가는 정당을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지지정당 교체를 통해 ‘호남정치를 복원하고 나아가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호남 유권자의 선택이자 명령이다. 생긴 지 2개월밖에 안된 신생 정당이 28석 중 23석을 석권한 것은 이 같은 호남 유권자들의 의지와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대목이다.” (중략)

지난 2016년 4월 18일 필자가 본지에 쓴 칼럼의 일부다. 당시 5일 전 치러진 20대 총선 결과를 분석하고 진단한 내용이다. 그로부터 벌써 4년이 흘렀다. 21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각 당은 막바지 공천과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전 매 광 장

이두현
본사 주필



또다시 초심 잃어버린 더불어민주당

당시의 상황과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같은 점은 호남에 텃밭을 둔 두정당이 경쟁을 벌인다는 점이고, 다른 점은 상호 지지도가 역전됐다는 점이다.

아울러 당시엔 야권끼리의 경쟁이었다면 이번엔 여야 간 경쟁이라는 것이다. 좀 더 들어가 당시 상황을 들여다보자. 20대 총선 당시 호남은 더불어민주당과 신생 국민의당의 백방이었다. 생긴 지 2개월여 밖에 되지 않은 국민의당과 수십년 맹주를 자처 해온 민주당의 치열한 전투(?)가 펼쳐진 것이다. 민주당은 자만했다. 호남민심이 민주당을 버린 것임을 그들만의 착각에 빠져 있었다. ‘공천만 하면 무조건 찍어 줄 것’이라는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

경선률을 제멋대로 바꾸고, 민심에 아랑곳없이 전략공천을 내리쬐었다. 호남민심은 분노했다. 더 이상은 안된다는 반민주당 정서가 급속히 퍼져 나갔다. 지역 유권자를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아는 민주당을 이번만큼은 심판해야 한다는 절기가 번득였다. 그 틈새를 노린 것이 국민의당이었다.

민주당을 탈당한 현역의원들이 안철수를 대표로 뭉쳤다. 마음이 뜬 지역 유권자들에게 대안처를 제공한 것이다. 그 결과 결과는 혁명적이었다. ‘민주당 전멸, 국민의당 싹쓸이’의 선거 결과가 그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어떤가? 그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당시의 민주당과는 비교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또한 어느 지역보다 높다. 그래서일까? 반성하고 고개 숙이던 낮은 자세는 어느 순간 사라졌다. 고개를 뺏겨 쳐들고 민심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이 당시와 똑 닮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치러진 공천 행태를 보면 굳이 말 안 해도 익히 알 수 있다. 민심은 아랑곳없이 ‘불북·타락·구태’로 일관한 그들만의 리그를 보며 한심함을 넘어 탄식이 절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 오만방자함이 2016년에 비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나만의 생각일까? 후색선전·고소·고발에 불복·재심 등등. 여기에 일방적 선거구 폐주기, 전략공천, 경선률 반복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겁다. 역시 ‘공천만 하면 찍어 줄 것’이라는 그들만의 자신감(?) 때문이리라.

호남민심은 또다시 고민한다. 2016년 4월 13일, 그날의 선택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아울러 민주당 정부 재창출을 기원 하지만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건 당시와 닮은 꼴이다. 호남은 나라의 중대한 고비 때마다 혁명적 결단을 해 왔다. 그리하여 역사의 물꼬를 바꿔 놓았다. 그만큼 상황을 냉철히 보고 현명한 판단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성을 상실한 민주당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다.

사 설

광주시 제안 각 당 선거공약 반영해야

광주시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 선거공약안을 제안했다. 향후 광주 시가 추진할 역점 사업들을 공약안에 반영해 달라는 얘기다. 시가 제안한 사업들은 인공지능 중심 산업혁신, 노사상생 경제도시 구현 등 30개 사업에 달한다. 사업비는 7조7,180억원 규모로, 산업경제와 여성아동, 복지인권, 문화체육, 환경안전, 도시교통, 자치혁신 등 시정 전반을 망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경제 분야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혁신 및 노사상생 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데이터 중심 개방형 인프라 조성, 인공지능 중심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 기반 재난 예측 광기능 상용화 플랫폼 구축 등이다. 여성아동 분야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가족돌봄거점 가족센터 건립사업 등이다. 복지인권 분야는 장애인 수련시설 건립, 공공실버주택 건설, 5·18 Street Museum 시스템 구축, 국립 트라우마 치

유센터 건립 등이다. 문화체육 분야는 국립광주국악원 유치,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국립 아시아현대미술관 유치, 남도 신관류 복합 문화테마파크 조성 등 7개 사업이다. 환경안전분야는 물순환선도도시 조성,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스마트 안전 위치 플랫폼 시범구축 등이다. 도시교통분야는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 도자구 개발,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 건설,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 조속 선정 등 6개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자치혁신 분야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미래도시 기반 구축을 제안했다. 이번에 광주시가 제안한 총선 공약은 마레 광주의 획기적 도약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각 당은 광주시의 제안을 공약으로 채택해 선거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바란다.

치료 후 퇴원 기준 강화 타당한 조치다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 후 퇴원 기준을 강화했다. 퇴원 후 6일 만에 또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광주 3번 확진자 A씨(30·남)가 그로, A씨는 증상이 소멸돼 지난 5일 퇴원했다. 이후 광주소방학교에서 시설 격리된 뒤 격리 해제(12일)를 앞두고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A씨의 사례를 바이러스의 재활동화나 재감염 이라기보다는 보고 상태 유지로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바이러스는 3주 이내 소실되는지만 A씨의 경우는 ‘회복기 보균자’로 보인다는 것이다. 앞서 시흥에서도 확진자가 퇴원 후 검사에서 또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아 재입원한 사례도 있었다. 이렇듯 퇴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발병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추가 전파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퇴원 후 재발병도 신경 써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광주

시는 확진자의 퇴원 기준을 강화하고, 퇴원한 신천지 교인들의 관리 또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퇴원 전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고 퇴원 및 격리 해제 기준을 높인다는 것이다. 특히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는 퇴원 전 진단검사 2회 음성, 발병일로부터 3주 경과 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통과해야 퇴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퇴원 후에도 일정기간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 격리토록 조치했다. 실제로 광주소방학교에 생활치료센터를 마련, 자가격리가 남아 있는 교인들을 입소시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시의 이 같은 조치는 지금이 당연한 조치로 여겨진다. 퇴원 후에도 재발병이 이어진다면 지역 사회 확산은 견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선제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다 소건의 불만이 따르더라도 공동체의 안녕을 우선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고

AI 강국 코리아, 데이터 확보가 우선



손경종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시대가 가능해진 것이다.

세계 10대 기업 중 7개 기업이 데이터 기반 기업으로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국가와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IBM CEO 지니 로메티는 ‘데이터는 21세기의 새로운 천연자원’이라며 데이터와 클라우드가 산업과 비즈니스를 역사적으로 바꿔 놓을 것이라고 했고, 롤랜더버거 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는 새로운 자원이다’고 했다.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9일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활용이 용이해져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마련됐다. 빅데이터 산업경제가 활성화돼 맞춤형 정책지원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확대와 각종 산업에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1월 29일 ‘인공지능 광주시대 비전선포식’에서 국내 굴지의 기

업과 연구기관, 광주지역 병원 등 12개 기관과 데이터를 제공·공유하며 상호 협력하기 위한 협약을 가졌다. 상반기 중으로 10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와 데이터 공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 기계학습이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향후 입주기업들의 기술개발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오는 2024년까지 4,116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되면 첨단3지구에 컴퓨팅 파워 100페타플롭스, 저장용량 128페타바이트급의 슈퍼컴퓨터를 보유한 데이터센터와 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에 특화된 3개의 실증동 및 창업동이 건립된다.

이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는 규제프리존 지정이나 실증특례 적용 등을 거쳐 이용 가치가 있는 차별화된 양질의 데이터로 수집·가공돼 추후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 개발과 창업을 위해 활용될 것이다.

특히 헬스케어 개발을 위해서는 규제프리존이나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로

는 개인의 맞춤형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 상업적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마 이데이터사업 등을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미 미국·영국·프랑스·핀란드 등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데이터의 권리를 데이터 발생자가 가짐으로써 구매·교통·통신·의료 등 온라인 서비스에서 파생된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하고,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가 진료받은 병원의 진료 정보·건강검진 결과 등을 스마트폰으로 내려받아 건강관리업체에 맡겨 새로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데이터 이동권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 협약을 맺은 기업·기관과 세부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제공된 데이터가 바로 산업과 공공서비스 등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특지광장

18세 선거권, 새로운 대한민국 원동력되길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선거권이 만 19세 이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되면서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 약 50만명 정도의 만 18세(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 청소년들도 새롭게 선거권을 갖게 됐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청소년을 미성년 취급하는 경향이 많아 선거권 하향조정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아마도 아직 이성적 판단이 자리 잡지 못하고, 한창

공부할 시기라 정치관을 충분히 함양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선거에 참여할 때가 아니라 우러 속에 선거관리위원회는 18세 유권자 교육 자료를 발간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유권자의 의미와 투표의 가치, 투표 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책임감을 갖고 권리와 의무를 다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줌으로써 정책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효과, 청소년들의 인권신장, 국정운영에 청소년의 의견을 받

영할 수 있다는 여러 장점이 기대된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학생 자신의 입장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고,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해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열어줘야 한다.

우리 사회는 ‘생산력의 중추를 담당하는 청장년층’만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열정을 가진 청년, 오랜 지혜를 가진 노인 등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치를 외면해서도, 방관해서도 안 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함께 살아가는 주인으로서 그동안 외면했던 정책

들을 잘 살펴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주체가 된 청소년들도 청소년을 대표한다는 주인의식으로, 참여의 노력과 준비로 사회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주권행사를 해야 한다.

이번 총선은 청소년 유권자의 등장으로 더 풍성한 정치토론의 장이 될 전망이다. 입시제도, 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등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다. 새로운 유권자의 등장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반봉배 보성군서관위 사무과장

지역 민심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

기지사첩

더불어민주당의 원칙 없는 공천관리로 광주·전남 곳곳에서 경선 후폭풍이 거세다. 허술한 공천관리와 지역 민심을 무시한 중앙당의 결정은 ‘오만한 민주당’이라는 시·도민들의 민심을 사며 정치혐오와 불신이 팽배해져 뒷발 탈환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나온다.

‘원팀’ 정신으로 감동 있는 경선을 치러 당과 후보들의 동반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던 것과 달리 역효과만 초래한 셈이다.

민주당의 공천시스템 부재는 경선 이후 곳곳에서의 재심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중 재심이 신청된 지역은 3분의 1인 6곳 중 4곳에서 재심신청이 이어졌다. 광산율은 재경선이 확정됐고, 동남갑과 북구를, 광산갑은 기각됐다.

광산을 선거구는 우여곡절 끝에 오는 19·20일 재경선을 실시한다.

주철현 예비후보의 재심 통과에 따라 민주당 여수갑 후보 경선은 기존 컷오프를 통과했던 강화수·김유하 예비후보 간 3차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선거구 확정과 전략공천으로 순천·광양·곡성·구례 지역은 반민주당 정서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경선에서 탈락한 경향업 예비후보는 새로 편입된 순천시 해룡면의 민의를 반영한 재경선을 요구했다.

지역정가는 민주당 경선 후폭풍을



황애란
정기부 차장

당 지도부가 또다시 ‘민주당이면 아무나 된다’,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는 오만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민생당 광주시당은 ‘오만한 민주당에게 광주시민은 붕이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허술한 공천관리를 지적했다. 참여자치21도 논평을 내고 “이번 민주당의 경선 혼탁과 공천잡음을 보면서 공천위와 최고위 등 지도부의 안일하고 무능한 구태정치 행태를 저자 확인했다”며 “공명정당한 ‘시스템 공천’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정가에서는 민주당의 경선 후폭풍이 심화될 경우 또다시 민심이반 현상이 나타나는 등 모처럼의 ‘기회’가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략공천에 반발해 4년 전 광주·전남에 일었던 녹색돌풍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지역 민심을 외면한 민주당의 공천 결과가 올해 4·15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신고	182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3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	金善勇	주필	李斗憲
변경국장	朴元雨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 010-4601-5323
정 치 부	(062) 720-1060-62	편집 부	(062) 720-1070	기 사 제 목	• TEL (062) 720-1050-54
경 제 부	(062) 720-1066-67	논 설 실	(062) 720-1032	• 세 회 부	010-6633-8826
사 회 부	(062) 720-1050-54	전 산 실	(062) 720-1033	• FAX	(062) 720-1080-82
사 회 2 부	(062) 720-1043-45	월 간 국	(062) 720-1006-07	• E-mail	jndn@chol.com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관 리 국	(062) 720-1012	광고문의	• TEL (062) 720-1016-17
서부권본부	(061) 285-9816-17	판 매 국	(062) 720-1098	• FAX	(062) 720-1020
문화체육부	(062) 720-1071-72	사 업 국	(062) 720-1011	• E-mail	jnmi1000@hanmail.net
사 진 부	(062) 720-1040	광 고 국	(062) 720-1016-17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우)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삼산빌딩)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주 주:한화주공필사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